

글로벌 디지털 산업 · 정책 주간 동향

Global Digital Industry & Policy Weekly Trends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CONTENTS

- 미국, EU에 관세 합의 이행 조건으로 빅테크 규제 완화 요구
- 폴란드, 애플 앱추적투명성(ATT) 정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실시
- 애플, 인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 미국 법원, 구글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에 대한 구제책 확정
- EU, 엑스(X)에 DSA 위반 과징금 부과...미국은 반발
- 중국 배달 플랫폼들, 과열 경쟁으로 영업 손실 기록

미국, EU에 관세 합의 이행 조건으로 빅테크 규제 완화 요구

- 미국이 지난 '25년 7월 EU와 타결한 관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EU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요구

▶ '25년 11월 24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 이행 상황 논의 회담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은 EU 측에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디지털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

- 이번 회담은 '25년 7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한 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면 회담으로, 이 자리에서 EU는 미국에 합의대로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와인·주류의 관세 인하를 시행할 것을 촉구*
* 당시 협상에서 미국은 유럽에 관세율을 15%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유럽은 미국에 대한 투자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는데, 미국은 현재도 여전히 유럽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용 품목도 확대
- 그러나 EU 측 요구에 대해 러트닉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를 원한다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
- 그는 EU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이 규제 대상 기업을 결정하는 데에 특정 임계값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대부분 미국 기술회사들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
- 그러면서 “기술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자”면서, EU가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면 미국 기업들이 EU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데에 수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와 DSA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보호무역이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EU를 압박 중

- 또한 미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스트리밍 또는 디지털 광고 회사에 부과되는 디지털서비스세도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EU 측은 디지털 규제는 관세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요구와 무관하게 역내 디지털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가 여전히 디지털 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EU의 규제는) 차별적이지 않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
- 다만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루트닉 장관과의 만남에서 DSA와 DMA 시행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한편으로, EU의 디지털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EU는 '26년부터 AI법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빅테크는 물론 역내 기업 반발과 미국 정부의 압박 속에서 AI법 핵심 조항 적용을 16개월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추진 중

• 미국과 EU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무기로 EU에 디지털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면서 양국 간 협상 이행에 난항이 지속

[출처]

- BBC, “US presses Europe on rules for big tech companies”, 25.11.24.

폴란드, 애플 앱추적투명성(ATT) 정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실시

- 폴란드 경쟁·소비자 보호청(UOKiK)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경쟁사 광고를 제한하고 자사 광고 생태계에 유리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

▶ '25년 11월 25일 UOKiK는 애플이 도입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인 앱추적투명성(ATT)* 정책이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

* (App Tracking Transparency) '21년 iOS/iPad 14.5 버전부터 도입된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으로, 모든 앱에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추적' 시 해당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할 것을 의무화

- UOKiK는 ATT 정책이 타사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을 억제하는 반면 애플은 자사 광고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을 수 있다고 판단
- 애플은 iOS 기기를 제조할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퍼블리셔이자 모바일 광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게재
- 이로써 애플은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 퍼블리셔와 경쟁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자사 iOS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에 적용되는 운영 규칙을 설정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
- 이 가운데 애플은 ATT 정책을 도입 후 자사 앱에서는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개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출하는 반면,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의를 구할 때에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동의 요청 문구를 표출
- 이에 UOKiK는 ATT 정책이 타사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을 억제하고 애플의 자사 광고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을 수 있다고 판단
- 토마스 흐로스트니(Tomasz Chrostny) UOKiK 청장은 "ATT가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애플의 지배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한편, 애플의 ATT 정책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반독점 규제 당국들로부터도 감시의 눈길을 받고 있는 상황

- 앞서 '25년 3월 프랑스는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ATT 정책을 도입한 것은 타당하지만 그 구현 방식은 비대칭적이고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애플에 1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 또한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의 규제당국들도 현재 애플의 ATT 정책을 검토 중

•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유럽의 경쟁 규제 환경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프랑스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ATT 정책으로 지배력 남용이 인정돼 처분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

[출처]

- UOKiK, "Is Apple restricting competition? President of UOKiK brings charges", 25.11.25.

애플, 인도 반독점법 위한 소송 제기

-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시 인도 내 매출액 기준이 아닌 글로벌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인도 반독점법의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 '25년 11월 26일 애플은 인도 반독점법에 명시된 과징금 산정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인도 델리 고등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

- '24년 개정된 인도 반독점법은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인도가 아닌 글로벌 매출액을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
- 애플의 위헌 소송은 CCI가 틸더의 모기업 매치 그룹(Match Group) 등이 제기한 불만에 따라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제기
- CCI는 아직 애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21년 12월에 애플에 내린 명령에서 "유료 앱과 인앱 구매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앱 개발자의 결제 처리 시스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어 애플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
- 현행 인도법에 따라 글로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CCI는 애플에 최대 38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
- 그러나 애플은 CCI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법 위반 범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과징금 산정 기준이 "합법적이지 않고, 엄청나게 불균형적이며, 불공정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CCI와 일부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글로벌 매출로 삼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

▶ 인도의 개정 반독점법은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소급 적용까지 허용하고 있어 공정성, 비례성, 적정한 규제권한의 범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쟁을 초래

- 따라서 애플이 제기한 위헌 소송의 결과는 애플뿐만 아니라 인도 규제기관의 글로벌 빅테크 규제 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번 소송의 결과는 인도의 반독점법 집행 방식에 하나의 선례로 남을 수 있으며, 산업 혁신, 경쟁, 소비자 보호 이슈가 교차하는 미래 반독점 규제 및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출처]

- CNBC, "Apple is challenging India's antitrust body over a potential \$38 billion fine", 25.11.27.
- The American Bazaar, "Why Apple is taking India's antitrust penalty law to court" 25.12.1.

미국 법원, 구글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에 대한 구제책 확정

- 미국 법원이 구글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독점을 인정한 데에 이어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구글에 대한 경쟁 회복 조치(구제책)를 확정

▶ '25년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24년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행사했다는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명령을 확정

- 미국 법무부가 '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재판은 '23년 9월 시작되었고, '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25년 4월부터 구글에 대한 구제책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어온 상황
- 법원은 이번 구제책 결정에서 구글에 대해 ▲기기 제조사와 기본 검색엔진 등에 대한 장기 계약 금지 ▲검색 상호작용 데이터 공유 등을 명령하고, ▲기술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구체화해 제시
- 먼저, 법원 명령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삼성 휴대폰, 기타 디바이스 등의 제조업체와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설정하기 위한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는 있으나 계약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
-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성 AI와 관련된 서비스·앱·도구·모델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사전 탑재 계약에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구글은 향후 매년 자사 서비스를 스마트폰 기본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다른 경쟁사들과 계약 경쟁을 벌여야할 전망
- 또한 구글은 순위집계 및 AI를 학습하는 데 사용된 원시적인 검색 상호작용 데이터(raw search interaction data)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하는데, 다만 구글의 알고리즘은 공유 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공유 대상을 결정할 기술위원회는 이해상충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 수행 직전 6개월 또는 직무 수행 1년 후까지 구글 또는 경쟁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정보 검색, AI,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해야 함
- 구글은 아직 구제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구글과 법무부 모두 항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당초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나 안드로이드 조건부 매각과 같은 강력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25년 9월 구글이 사업 일부를 강제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

- 당시 법원은 법무부가 구글이 시장에서 불법적인 제약을 가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핵심 자산의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

• 구글에 대한 구제책의 핵심은 구글과 기기 제조사 간 기본 검색엔진 장기 계약을 차단하는 데에 있으나 다른 경쟁사들이 기본 검색엔진 계약을 두고 구글과 경쟁할 수 있을지는 의문

[출처]

- CNBC, "Judge finalizes remedies in Google antitrust case", 25.12.5.
- WPN, "Judge Blocks Google's Forced Gemini AI Bundles in Antitrust Case", 25.12.6.

EU, 엑스(X)에 DSA 위반 과징금 부과...미국은 반발

- EU 집행위원회(EC)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주장하며 반발

▶ '25년 12월 5일 EC는 엑스에 대해 DSA 위반 혐의로 1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

- DSA는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 차단 및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EU의 디지털 규제법으로, EC는 지난 1년 여 동안 엑스의 DSA 불이행 의혹을 조사한 후 이 같이 결정
- EC는 엑스의 인증 배지(블루 체크) 설계*가 기만적이며, 엑스가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구자들의 공공 데이터 접근도 차단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 * 블루 체크는 사용자 계정명 옆에 표기되는 마크로, 원래는 정부 당국자나 공적 인물, 언론인 등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는 점을 나타내는 인증 방식이었으나 머스크가 엑스를 인수한 후로는 프리미엄 서비스(유료) 이용자 모두 블루 체크 이용이 가능
- EC는 이번 제재 결정 발표 전 '24년 7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도 블루 체크가 "이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계정이나 콘텐츠의 진위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다"면서 누구나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면 인증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 대해 우려를 밝힌 바 있음
- EC의 이번 결정은 최초의 DSA 위반 제재로, 엑스는 60일 이내에 블루 체크 시스템 개선 조치를, 또한 90일 이내에는 투명성 의무 준수 및 연구자 공공 데이터 접근 보장 조치를 마련해 EC에 통지해야 함
- EC는 엑스가 계속해서 DSA를 위반하거나 불충분한 조치를 제시할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할 방침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EC가 엑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술 플랫폼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번 과징금은 엑스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을 향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던 카(Brendan Carr) 위원장도 "유럽의 숨막히는 규제에 의해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유럽) 대륙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시도"라고 조롱
- EU 주재 미국 대사 앤드류 퍼즈더(Andrew Puzder)는 "지금까지 EU가 부과한 벌금은 모두 미국 플랫폼에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U가 디지털 법률을 통해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
- 한편, 최근 미국은 EU가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불과 수일 후에 EC가 엑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EU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고조

• EU와 미국이 관세를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발표된 EU의 엑스 제재로 인해 EU와 트럼프 행정부의 경색된 관계에 긴장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출처]

- Politico, "An attack on all American tech platforms': Trump admin decries EU fine on Musk's X", 25.12.5.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정책연구실 시데이터분석팀

중국 배달 플랫폼들, 과열 경쟁으로 영업 손실 기록

- 중국의 주요 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Meituan), 알리바바 계열의 어러머(ele.me),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JD.com)의 징둥이 배달 시장에서 보조금 출혈 경쟁을 펼치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

▶ '25년 초부터 과도한 보조금 지출 경쟁을 펼쳐온 중국의 배달 플랫폼 3사는 '25년 3분기에 모두 영업 손실을 보고

- 중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메이투안과 어러머가 양분하는 구조였으나 징둥이 '25년 초부터 배달 시장에 뛰어들면서 배달 플랫폼 간 보조금 및 할인 전쟁이 가열
- 소비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플랫폼에서 주문을 하게 되므로 배달 플랫폼들은 고객을 위해 대대적으로 판매비용을 지출하며 배달 할인과 마케팅에 사용
- 중국의 배달 플랫폼 3사가 '25년 2분기와 3분기에 배달 보조금 관련 판매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1,047억 위안(140억 달러) 이상으로, 특히 알리바바의 지출액이 545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징둥은 262억 위안, 메이투안은 240억 위안을 지출
- 그 결과 메이투안은 3분기에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인 198억 위안(27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알리바바의 영업이익은 352억 위안(49억 달러)에서 54억 위안(7억 5,000만 달러)으로 감소했으며, 징둥은 105억 위안(14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
- 보조금 지급의 결과로 배달 플랫폼의 주문량은 증가했는데, 예로 메이투안의 3분기 즉시 배달 주문량은 71억 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

▶ 중국 배달 업계는 보조금 전쟁이 '25년 3분기에 정점에 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조금 지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메이투안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배달 가격 전쟁은 본질적으로 악성 경쟁이며 지난 6개월간 이 같은 경쟁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보조금 경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
- 징둥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알리바바도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효율적이고 동적으로 투입 전략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
- 한편 올해 중국에서 배달앱 출혈 경쟁이 논란이 되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등은 3개 배달 플랫폼과 면담을 갖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

• 중국 배달 플랫폼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일제히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업계에 가격 할인 경쟁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

[출처]

- 南方产业智库, "三大巨头单季'烧掉'近600亿元, 即时零售能否'补'出个未来?", 25.12.5.
- TechNode, "China's food-delivery price war sees Meituan, Alibaba, JD.com incur \$14B in costs across two quarters" 25.12.1.